# "이-팔 전면전 대비 교민·여행객 안전 대책 세워라"

윤 대통령 "국제 분쟁 확대 배제 못해…대외 불안정 요인 긴밀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 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 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 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 라엘군의 무력 충돌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

윤 대통령은 "이미 1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 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 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 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75년간 아랍국가 연합세력과 네 차례, 레바논과 두 차례, 하마스와 네 차례 각각 전쟁과 무력 분쟁을 치른 바 있다고 윤 대통령은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 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 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해왔다"며 "우크 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 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

윤 대통령은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 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긴 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 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 외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 불 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 융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 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찾아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 김건희 여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감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제10 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아 전시 작 품을 둘러봤다.

이날 광주를 찾은 김 여사는 강기정 광주시장, 나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국민의힘 주기 환 광주시당위원장 등과 함께 전시된 작품을 감상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행사 기획자를 격려하고 우리 문화예술계 육성과 외국·지방정부 등과의 문 화예술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전시관에서 김 여사는 친환경 의자인 '세컨드라이프의자', 2024 밀라노 디자인위크 출품이 확정된 최경란 교수의 'ASEAN WAY' 등 주요 작품을 둘러봤다.

또 광주 서구 유치원생 20여명이 참여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 '더 리틀 큐레이터' 행사를 참관하 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북한 침투 가능"

#### 국정원, 보안 부실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 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 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 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 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 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 는 특정 유권 자의 기표 결과를 암호화해 볼 수 없도록 관리하고 는 있으나 암호 해독이 가능해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투표 조작을 넘어 개표 결과까지 바꿔버릴 수 있 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 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괏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USB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비인가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 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북한발 해 킹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선관위의 인터넷 컴퓨터가 북한 '김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 함에 저장됐던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해당 컴 퓨터의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자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이었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이번 점검에 서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했더니 31.5점에 불과했 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 "일본 대변하는 한국 대표단" vs "총선용 반일 감정 부추겨"

#### 여야, 외교부 국감 '일 오염수' 공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0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 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달 초 열린 국제 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걸로 본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 "이번에 간 우리 대표단이 일본의 방류를 정당화시켜주고 일본 편만 들고 왔다고 보여진다"며 "일본에 동조하고 일본을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와 같은 원칙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더 철저히 검증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다. 핵 폐수, 독극물 이런 얘기 하

'IMO 총회 보고서' 공개 설전 야 "우리 입장문 전문 요청 묵살 정부가 떳떳하지 못해서 숨겨" 박 장관 "해수부보다 선공개 안돼"

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나. 어민들, 수산업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일 감정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여야는 외교부의 'IMO 총회 보고서' 국회 자료 제출 및 공개 여부를 두고 국감 시작부터 한동안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IMO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입장 발표 전문을 요청했는데 며칠째 외교부가 전혀 전문 제공을 안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로 직접 연락하라며 해수부 핑계를 댄다"며 "이렇게 해서 국감이 되겠나"라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공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발언을 한국 국회가 받아볼 수없다면 정부가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총회의 공식적 인 결과보고서는 추후 사무국이 공표 예정이고, 당사국 총회 준비와 참여는 해수부가 주관하고 있 기에 외교부가 이 자료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 절치 않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외교부 장관이 사유를 분명히 설명했고, 해당 기구에서도 회의에 참석 한 수석대표 발언 전문을 공개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발표 안 하는 게 원칙이라 했다"며 정부를 거들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